

다산포럼



박원재
울곡연구원장

근래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 사회 갈등 이슈 중 하나로 성별 갈등이 있다. 가부장제에 기반한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양성평등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 현상이긴 하다. 하지만 갈등의 국면이 갈수록 날카로워져 우려를 낳는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의제화함으로써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반대가 있다. 반면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곤장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특정 유권자층의 이해에 영합하려는 행태라는 비판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유권자층이란 잘 알려진 대로 '이대남'이라 통칭되는 20·30대 남성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 현장 곳곳에서 여성이 아니라 이제 는 거꾸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성별 갈등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이대남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킬 방안이 대한 모색이요

성별 갈등과 ‘이대남’

청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문제에 관한 이대남들의 사고 전환도 필요해 보인다.

그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듯하다. 예전에는 남녀 간 불평등이 일상적이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취업 전선에서도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쪽은 남성들이다. 사회적 소수자라는 우산 아래 여성 할당제와 같은 갖가지 여성 우대 정책들이 폭넓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증거다.

따라서 이대남들의 이런 불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부모 세대와는 달리 적어도 이들 세대에서는 남녀 간 차별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해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대남으로서는 “우리사회의 남녀 차별 문화는 부모 세대의 책임인데 개선을 위한 역차별의 짐은 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가?”라고 억울함을 토로할 법도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OECD 가운데 최악이고, 유리천장 지수도 최하위이다. ‘독박 육아’와 ‘경단녀’는 여전히 남성과는 무관한 단어들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그것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부모 세대가 책임질 일이 지 우리 젊은 세대와는 무관하다고 해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일본에게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를 끊임없이 요구할까? 식민 지배는 지금을 사는 일본 젊은이들의 조부모 세대가 저지른 범죄다. 따라서 같

은 논리라면 우리는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를 요구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남녀 차별은 집단적이며 역사적인 유산이다. 세대를 불문하고 한국인인 이상 우리 모두는 그 유산에 대해 일정한 책임이 있다. 윤리적 책임 의식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집단적·역사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인간다움의 근본 덕목이기 때문이다.

일부 이대남들 사이에서 남녀평등을 단순히 기계적 평등으로 치환시켜 양성평등의 취지를 왜곡하는 주장이 개진되는 것도 우려스럽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려면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언뜻 공정한 요구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는 상상적 공정이 아니라 내가 겪는 일은 너도 똑같이 겪어야 한다는 심리에 뿌리를 둔 보복적 공정일 뿐이다.

설령 이것이 공정에 대한 합당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왜 하향평준화의 방향으로 그 공정의 추가 움직임이 할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지원병 제도나 대체복무 등 병역 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활성화시켜 군대를 가지 않음으로써 여성이 얻는 편익을 남성도 누리게 하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양성평등이 가야 할 길이라면 그것은 서로 끌어내림으로써가 아니라 서로 끌어올려 줄 때 도달된다는 점을 늘 생각했으면 한다. 그렇게 하여 우리 사회의 이대남들이 남녀 차별 세대의 막내가 아니라 양성평등 세대의 맏형으로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社說

야당 의원 12명 적발 부동산투기 근절 계기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의 위원회 김태웅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소속 의원은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이 각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에 해당했다. 야당 의원 12명 중 1명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으로 적발됐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로 지난 6월 말부터 이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왔다.

이번에도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의원의 실명과 구체적인 의혹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권익위는 특수부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위해 국민의힘·열린민주당에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소속 의원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총 13건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국민의힘이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에 앞서 조사를 마쳤던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 조사 발표 이후 해당 의원 12명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보다 엄격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보다 강력한 징계는 제명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동안 ‘개헌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도 높일 방안 찾아야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전문가들의 모임인 '직장갑질119'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은 지난 9·15일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 신뢰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이 진정·고소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는 질문에 노무사의 6.7%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한 답변은 66.7%나 됐다. 또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질문에는 9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근로감독관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3%만 '그렇다'고 답해 신뢰도가 현저하게 낮았다.

현장 노동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광주 지역 노무사들의 불만도 많았다. A노무사는 "신고를 하러 간 노동자들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정도 증거로는 안 된다' '법적으로 하면 서

로 피해가 있다' '실익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심지어 "노동적으로 회사 편을 드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근로감독관은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다. 그런데도 회사 입장을 더 배려하는 소극적 조사와 무성의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다. 물론 근로감독관들도 할 말은 많을 것이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의 경우 광주노동청 27명, 여수·목포지청 각 8명에 불과해 광주 6만 곳 전남 6만 7000곳에 달하는 사업장을 꼼꼼히 살피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증원부터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재교육이나 처우 개선 및 근로감독청 신설 등 그동안 제기된 근로감독관 제도 혁신 방안이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기 고

기업·혁신도시 전담 기구 설립을

극대화 등 혁신도시의 로드맵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채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며 성장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계획한 균형 발전의 거점화, 자생적 발전 동력 창출, 기업·대학 유치를 통한 지역 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남겨진 숙제는 강력한 조직적 뒷받침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

기업도시도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한 제도적 성과물이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2004년 12월 전경련 등 민간 경제단체의 제안으로 기업도시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6개 기업도시가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기업도시 개발이 시작됐다.

기업도시 선정 당시 1천만 평 규모의 기업도시가 지방에 설립되면 수도권에서 10만 가구 정도가 옮겨가고 주택·공장 등에 대한 건설 투자가 1조 원가량 이루어져 3만 명의 고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약화되면서 정책 효과가 급감하고 있다.

수도권에 근접한 충주와 원주가 사업을 준공했으나 당초 기업도시 취지인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정부(제도 지원), 지자체(행정 지원), 사업 시행자(사업 주도)의 역할 분담, 연결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 지원 확대, 기업도시개발 관련 지방세 감면 조

례 제정, 기업도시 내 주거시설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등 술한 난제가 쌓여 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다른 유사한 국가 균형 발전 제도하고 비교해도 정책적 형평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새만금은 청 단위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 개발, 정주 여건 조성, 투자 유치 등 전체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반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는 해당부처의 국·과 단위에서 관리 중이다.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 도시에 대한 창의적 리더십을 강화하여 책임성과 신뢰감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총리 직속 지역 균형 발전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글로벌 기업도시 중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우리도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전담 지원할 조직 신설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컨트롤타워를 확보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확고한 국가 균형 발전의 전략적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업·혁신 도시 지원청'이 조속히 신설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

참여정부가 도입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현실화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다.

10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인구 및 기업 입주를 유인하여 지역 산업 구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 분산에 크게 기여했다. 단적으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우 조성 이전인 2012년부터 5년 간 증가한 혁신도시 기업 수가 1570개, 일자리 수는 1만 3556개로 상전벽해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도시 수도권 인구가 순증하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2596만 명)가 비수도권 인구(2582만 명)보다 약 14만 명 많아졌다.

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 관련 기업 유치와 클러스터 형성 → 주변 지역과 국가 균형 발전 파급효과

기 고

5월 정신과 오페라 ‘무등등등’

보는 음악을 추구하는 세 시대의 흐름을 타며 5·18의 고난을 8·15 만세의 환호로 승화시킨 훌륭한 무대였다.

특히히 조태일의 '겨울 소식'으로 시작, 11명 시인의 18편의 시가 대본이 된 본 작품은 평화의 바람을 타고 온 세상의 민주화의 꽃이 만발하기를 한소리로 노래했다.

한 지역의 문화는 보존과 소통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지닌다. 지역문화를 후세에 보존 계승해야 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옷을 입고 다른 문화권과도 교류가 가능한 소통의 접점을 부단히 찾아감으로써 문화도시로 꽃피우게 된다. 보존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타 문화권에 우리 언어로 대화를 시도함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정율성 선생 작품의 우수성을 이야기 할 때 당시 중국 악기를 반주로 하여 경극 형태로 작곡된 시절, 한편으로는 각지의 민요를 채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타 문화권과의 교류를 선창하고 민요들을 주제로 하여 서양 악기로 편성된 작품을 남겼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를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은 선구자적 문화예술인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김선철의 '무등등등'은 현대음악 기법으로 작곡되어 있어 아시아권을 넘어 유럽 무대에서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작품이라 여겨진다. 더욱이 '새야 새야 파랑새야' 등 우리의 멋과 가락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현대음악으로 재해석되

어 있어 더욱 돋보이게 되는 것이다. 작곡가 김선철이 어렵게 느껴지는 현대음악을 조성의 틀 안에 담고자 고 노한 흔적이 역력하였다. 이와 같이 서양음악 어법을 우리 음악으로 중화시킴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날의 공연에는 지역 성악가들이 출연해 뛰어난 가창력을 보여 주었다. 다만 자막이 없는 가운데 더욱 선명한 가사 전달의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그동안 우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창작된 연극, 뮤지컬 등 각종 공연물을 접했다. 또한 수많은 창작 공연물이 무대에 오르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창작물은 기준과 모델이 없어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그만큼 작가의 굳은 신념과 배짱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다시 무대에 오르도록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

광주에는 5·18의 상황과 정신이 문화예술로 승화되어 표현되기를 바라는 문화시민들의 소망이 있다. 이에 5·18정신이 오페라 '무등등등'과 함께 국내외로 널리 선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이 내년, 아니 매년 5·18의 문화적 표상으로 공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리기 위해서는 나열식 대본을 극적인 구성으로 가다듬고 국악기와 함께 울리는 관현악 편성과 함께 음악 마디마디와 함께 세심하게 호흡하는 미디어아트로서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임해철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지난 8월 15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펠리체솔리스트(대표 강양은) 주최로 오페라 '무등등등'이 무대에 올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은 이미 1999년 빛소리오페라단(단장 최덕식) 창단 공연 작품으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 올려졌고, 2002년에는 서울 국립극장 무대에서 공연돼 호평을 받기도 했다. 2010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으로 강숙자오페라라인에서 재공연했다. 많은 공연물이 그리하듯이 창작 작품은 반드시 무대라는 거울 앞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본 후 수정되어짐으로써 우수 작품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런 면에서 '무등등등'은 열약한 지역 공연예술계의 모범 사례로 여겨진다.

작곡가 김선철은 꾸준히 작품을 다듬어 금번 공연에서는 실내악 편성의 반주로 콘서트 오페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더불어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 아트와 클라보레이션 공연을 함으로써 듣는 음악에서

無等鼓

“죽음을 마주하는 인간의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국립 광주박물관 특별전 '함평 에데리 신덕고분-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10월 24일까지) 전시장에 들어서면 마주하게 되는 문구다. 발굴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함평군 월야면 에데리 '에덕평야'에 자리한 장고분인 '신덕 1호 무덤'의 다채로운 부장 유물들을 보여 준다.

전시장을 찾은 탐방객은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무덤에서 발견된

연리문 구슬

목관은 위계가 높은 계층이 사용하는 금송(金松)이 사용되었다. 또한 무덤방에서는 쇠비늘갑옷과 쇠투구를 비롯해서 금동관과 금동신발 파편도 함께 출토됐다. 사기질만 일부 남아 있는 어금니 분석 결과 무덤의 주인공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정성스럽게 꺼묻은 부장 유물뿐만 아니라 단단한 쇠비늘갑옷과 쇠투구에 누구냐는 것이다. 30년 전 발굴됐지만 여전히 배일에 싸여 있는 '신덕 1호 무덤'의 실체를 규명하는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한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나 이집트 및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일찍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시대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다.

이번 특별전은 단순히 발굴 유물을 보여 주는 게 아니라 '신박한 덕후가 되는 법을 위한 퀴즈 브로슈어'를 전시장 곳곳에 부착해 관람자와의 소통을 꾀하고 있다. 장고분과 관련된 여러 질문 중 하나는 '신덕 고분 1호 돌방무덤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것이다. 30년 전 발굴됐지만 여전히 배일에 싸여 있는 '신덕 1호 무덤'의 실체를 규명하는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한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